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국어 영역 (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민주 정치와 법

정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크게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활동, 즉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뜻한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뜻한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행동하다 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급 규칙 제정을 둘러싼 친구들 간의 의견 대립, 한정된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공공시설의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져서 결국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 해결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는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마찰을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를 둘러싼 갈등 등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혼란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정치는 부,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구성원이 이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치는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는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 활동을 통해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 규범에는 관습, 도덕, 법 등이 있는데, 그중 **법**은 국가에서 정한 사회 규범으로 도덕이나 관습과 달리 **강제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국가는 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 나가야 하는 원칙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법은 정의에 따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 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하게 하며, 노력한 사람에게는 노력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는 법 제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자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의미한다. 정

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이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추상적이다. 따라서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합목적성이다. 즉 합목적성은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근대 자유방임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중시하여 이를 법에 반영하였고, 오늘날은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공공복지의 내용을 법에 반영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이 쉽게 폐지되거나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인의 법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정의의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시효 제도 등이 있다.

1. (가), (나)는 정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기능이다. 정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나)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정치이다.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권력을 형성하고 배분하며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현상이다

— < 보 기 > —

- ㄱ. (가)는 (나)보다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 ㄴ. (가)는 (나)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ㄷ. (나)는 (가)와 달리 아파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 ㄹ. (가), (나) 모두 국무 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A는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봅니다. 반면 B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도 정치라고 봅니다.

교사

(○ : 예, × : 아니요)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	×	×	○	×
B는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가?		×	○	×	×	×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	×	○	×	×
B와 달리 A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가?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3.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복장 규정을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교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국가 권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교칙을 개정하는 과정은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칙을 개정하는 과정 역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을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③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④ 을의 관점은 갑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어의 민중(demos)과 지배 (krato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 즉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가의 주요한 의사 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곳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아테네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아테네는 의회 역할을 하는 민회, 행정 기구인 평의회, 사법 기구인 재판소 등을 통해 운영되었는데, 모든 시민은 민회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추천제와 운번제를 통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아테네의 시민은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일치하는 정치 형태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아테네는 평등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이러한 의미에서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갖는다.

고대 아테네 이후 절대 왕정 시기 동안 흐름이 단절되었던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시민 혁명**은 근대 초기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크게 성장한 시민 계급이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 한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 운동이었다.

시민 혁명은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천부 인권 사상**,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낡고 모순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계몽사상**,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 사람들 간의 계약으로 형성되었다는 **사회 계약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 시민 혁명으로 의회 정치를 확립한 **영국의 명예혁명**,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독립 혁명, 절대 군주제에 항거한 **프랑스 혁명**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시민 혁명을 통해 시민은 정치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며, 이후 유럽 사회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시민 혁명으로 확립된 **대의 민주제**를 통해 시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 혁명 이후의 근대 민주주의하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즉 노동자, 여성 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유한 시민 계급의 의사만 반영될 가능성이 컸다.

근대 시민 사회의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 여성 등은 참정권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노동자층의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성별, 신분, 재산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 사회의 건설은 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려는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었다.

보통 선거를 통해 온전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 민주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대의 민주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의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왕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국왕의 자의적인 지배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근대 시민 혁명 이후 민주 국가는 법치주의를 국가 권력 행사의 근본 원리로 채택하였다.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해야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법에 근거한 국가의 통치만을 받는다. 결국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17세기 영국 왕실 법원의 판사였던 에드워드 쿡(Coke, E.) 이 제임스 1세에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다. 이 주장은 절대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통치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에드워드 쿡의 주도하에 1628년 권리 청원이 작성되고, 1689년 권리 장전이 채택되면서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였다. 이후 18세기 미국의 독립 선언 및 프랑스의 인권 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역시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법치주의가 실현되면서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의 법치주의에서는 형식과 절차의 합법성만 강조되었다. 즉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률의 형식에 적합하지만 하면 그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의회가 적합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가능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 정권의 수권법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더하여 법의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의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처럼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과 더불어 법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충족하여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의 바탕

위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된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지배는 곧 국민의 지배이며,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해 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의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변화를 바라는 여론과 기존의 법질서가 일치하지 않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여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공존**하지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됨으로써 양측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4. (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한 대표 기관 구성권을 보유하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 ①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 ②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 ③ (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 ④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 ⑤ (가), (나)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5. (가), (나)는 민주 정치 형태에 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 모두가 대부분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 결과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민은 능력과 자격을 갖춘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믿고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국민이 대표만 직접 선출하고 중대 사안의 결정을 대표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도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방관자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 ① 국민 투표는 (가)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 ② (가)는 대표의 정치적 전문성을 중시한다.
- ③ (나)는 엘리트 정치를 옹호한다.
- ④ (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반대한다.
- ⑤ (가), (나) 모두 대표가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원리를 불신한다.

6.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서 국가 권력은 주권자의 의사가 집약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구속되는, 국민의 자기 지배가 곧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의 행태가 보여 주었듯이 당시 나치 독일은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는 A 를 통해 비민주적인 체제로 이행하였다. 이후 법치의 본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단순히 형식적인 합법성에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요청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B 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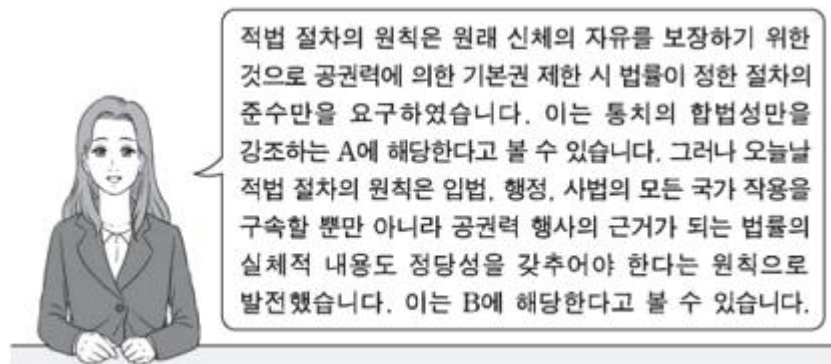
- ① A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국가 기관과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B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는 A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⑤ A, B 모두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이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추천을 받으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 국회 의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서 ㉡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민은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 정책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희망 공약으로 제안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해당 제안은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은 전체 유권자의 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 ② ㉡과 달리 ㉢은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 ③ ㉢과 달리 ㉠은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 ㉡ 모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⑤ ㉠, ㉢ 모두 정치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8.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은 원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법률이 정한 절차의 준수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법 절차의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 작용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B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① A와 달리 B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A와 달리 B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그 법적 제재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 ③ B와 달리 A는 공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공권력 행사가 법률에 따를 것만을 강조하여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⑤ B와 달리 A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3.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다. 또한 헌법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으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 작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절대 군주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근대 민주 사회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헌주의를 확립하였다.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고 헌법에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음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의미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으로 변천해 왔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 관계 및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나아가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이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말한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프랑스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6조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 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나아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을 말한다. 1919년에 제정된 2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 최초의 형태로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형식적 평등과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반면,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최상위의 근본 규범인 헌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헌법은 **국가 창설의 토대로** 기능한다. 헌법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일정한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한다.

둘째, 헌법은 **조직 수권 기능**을 한다. 수권이란 권한을 준다는 의미로 헌법은 국가 기구를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 조직의 정당성이 헌법에 근거하도록 한다. 따라서 모든 권력 기관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헌법은 **권력 제한 기능**을 한다.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헌법은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은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 운영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헌법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다섯째, 헌법은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은 정치 생활의 큰 흐름이 헌법에 따라 주도되고 규제되도록 하여 정치적 혼란을 막고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헌법을 정치 규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다. 이는 헌법 및 법률 등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며,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기본권을 해석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의 심사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문화 국가의 원리, 평화 통일의 지향 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밝혀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 역시 국민 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국민 투표로 헌법이 개정되었음을 밝혀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민주적 선거제도와 국민 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자유롭게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복수 정당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시하는 원리이며,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 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사유 재산제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 헌법의 등장 이후 개인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 국가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복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여 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복지 국가의 원리**란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를 가리킨다.

우리 헌법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 실시,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 등도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제1,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인류는 전쟁의 참혹성을 체험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에서 국제 평화주의가 등장하였다.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로, 세계 각국은 **국제 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문화 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제9조에서 국가의 문화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여 이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 진흥, 무상 의무 교육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화 통일 지향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 평화 통일 지향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장기 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요양 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헌법 재판소는 영유아 보육법의 직장 보육 지원 조항이 근로자들의 안정적 육아 및 고용 안정을 이루어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②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 ③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 ④ 상호주의에 근거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위를 보장한다.
- 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다.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해 의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A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이 원리에 따라 경제적 약자에 대해 의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 보 기 > —

- ㄱ.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 ㄷ. 개인의 운택한 삶에 필요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ㄹ.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한 빈부 격차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대화에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사유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 ② (가)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부터 강조되었다.
- ③ 국제 평화 유지군 활동에 대한 지원은 (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가)는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생활을 진흥하되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 ⑤ (가)에 따라 국가는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 다음에서 공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①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
- ②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를 확대한다.
- ③ 문화재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
- ④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제를 확대한다.
- ⑤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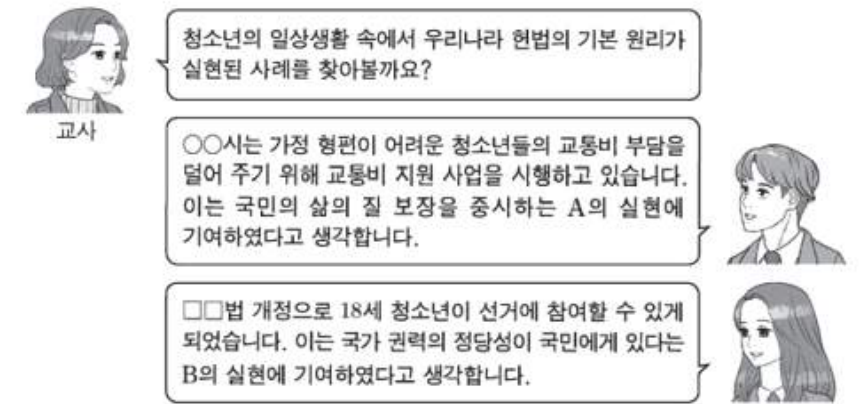
1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대전을 통해 인류는 국가 간의 평화 질서 내에서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가)을/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인 대치 상황과 이산가족 문제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은 (나)을/를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 < 보 기 >
- ㄱ. (가)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해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 ㄴ. (가)의 실현 방안으로 ‘재외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 적절하다.
 - ㄷ. (나)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ㄹ. (나)의 실현 방안으로 ‘모든 유형의 전쟁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적절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따라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② B에 따라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 ④ B와 달리 A는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⑤ A, B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4.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며, 인권이 보장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를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한다. 이 사상에 따라 생명권, 자유권 등을 천부 인권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즉 인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간이 가지는 **초국가적 권리**이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근대 국가는 천부 인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헌법에 구체화하였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본권이 천부적 권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된다.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은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절대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처

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각 개인을 달리 대우하는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법 앞의 평등은 어떠한 차별 대우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자유권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는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자 구체적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자유권은 크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로 분류된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을 비롯한 모든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 영장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

회, 결사의 자유를 두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능동적 권리**에 해당한다. 참정권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로, 시민 혁명 이후의 근대 민주 국가에서는 재산 등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였으나 선거권이 확대된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는 대통령, 국회 의원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 부담권**, 국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헌법 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하였지만 빈부 격차 심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회권이 등장하였다.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최저 임금제의 실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앞의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인 데 비해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청원권, 법적 분쟁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권익이 충돌할 때 이들이 각자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이라고 한다. 이익 집단이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근 상점이 시위에 방해받지 않고 영업할 권리가 충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간에 충돌하는 기본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는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보호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해 주는 **법익 형량의 원칙**, 대립하는 기본권을 양립, 조화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 등이

있다.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불가침의 인권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하게 보장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을 돈으로 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권은 헌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먼저,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무분별한 개발 제한,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같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없이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밝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헌법이 이러한 기본권 제한 조항에 엄격한 요건과 한계를 둔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5.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갑은 일정한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디엔에이(DNA) 시료를 영장에 의해 채취하도록 한 ○○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당하였다. 갑은 ○○법 조항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채취 요건의 규정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신체의 안정성과 자율적 활동에 관한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갑은 해당 조항이 강력 범죄자와 경미한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B를 침해하고,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와 사후 불복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C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기본권이다.
-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 ④ A는 소극적·방어적 권리, C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 ⑤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16. 기본권 유형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권 중 행복 추구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한편 신체의 자유로 대표되는 A와 재판 청구권과 같은 B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C와 국민 투표권과 같은 D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① B는 C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 기본권이다.
- ② C는 A보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인 권리이다.
- ③ D는 A보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 ④ A와 C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⑤ B와 D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17. 다음의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사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 ②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동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③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④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 권리라는 점을 보여 준다.
- ⑤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갑은, 구치소장이 수용자 거실에 설치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해당 행위는 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감시만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갑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 ①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 ② 갑이 청구한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 ③ 갑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④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행위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헌법 재판소는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다.

5. 정부 형태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대의 민주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자들의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현대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는 이들 국가 기관 중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된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이고,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 엄격하게 분리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비롯한 정부 형태이다. 영국 의회는 오랜 기간 국왕과 갈등을 겪어 오다가 명예혁명(1688)과 권리 장전(1689)을 통해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립하였다. 그 결과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세워졌으며, 의회 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 내각제가 성립하였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가 구성되며, 행정부인 내각은 원칙적으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소속 정당 의원들을 내각의 각료로 임명함으로써 구성된다. 임명된 각료는 총리와 함께 내각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비롯한 정부 형태이다. 미국은 영국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국 독립의 주도자들은 국가 기관 간에 더욱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하였다. 그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에 바탕을 둔 대통령제가 성립하였다.

대통령제에서 국민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며, 행정부는 대통령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행정부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며, 총리와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과 대통령이 각각 별도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독립적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과 내각 모두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한편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므로 서로를 불신임하거나 해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의회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 등 **각종 동의, 승인권**과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능률적 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며, 의회의 신임을 잃은 내각은 사퇴해야 하므로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또한 내각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고, 반대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의 총리에 비해 국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독재 정치가 출현할 우려가 있으며,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제헌 의회에서 의원 내각제를 전제로 정부 형태를 논의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였다. 이 때문에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일부 더해졌다.

이후 초대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 집권, 부정 선거 등으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후, 대통령제에 대한 반발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1962년에는 의원 내각제가 폐지되고 다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도입되었다. 1972년에는 대의원에 의해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유신 체제라는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가 나타났다. 1980년에는 제8차 개헌을 통해 **유신 체제**가 폐지되고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하여 계속되던 민주화 운동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1987년에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 헌법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고, 국회는 **각종 동의권이나 탄핵 소추권의 행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 요소 외에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19.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질문	국가	갑국	을국
(가)		예	아니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 < 보 기 > —————
- ㄱ. (가)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라면 갑국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 ㄴ. (가)가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라면 을국에서는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ㄷ.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가)에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가)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 형태는 전형적으로 A와 B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행정부가 의회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존속하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B는 의회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어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하며 존속하는 형태이다. ㉠ A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장치가 있는 것처럼 ㉡ B에서도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가 존재한다.

- ①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 중의 하나이다.
- ②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 중의 하나이다.
- ③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한 경우 행정부 수반과 각료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A에서 나타난다.
- ④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A에서 나타나는 장점이다.
- ⑤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은 B에서 나타난다.

21.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자 :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한편,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을 : 대통령은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 < 보 기 > —

- ㄱ. 갑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행정부와 국회 간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행정부가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 35%, 을국 65%이며, 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는 질문에 따라 갑국과 을국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 \ 국가	갑국	을국
(가)	예	아니요
(나)	예	예

- ① (가)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가)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나)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나)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⑤ (나)에 ‘의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2개만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가)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면 권력이 남용되기 쉬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국가 기관에 분산하고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 기관에 분산하고 권력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기관의 조직 원리를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한다.

권력 분립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대부분 민주 국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 국가 권력을 분산하는 삼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회와 정부, 법원이 각각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여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또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와 교섭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하는 합의체로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가 있다. **교섭 단체**는 일반적으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원내 단체로, 국회의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한다.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본회의**이며, 여기서는 국가의 중요 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형태로 열린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일반적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권, 조약 체결 및 비준에 관한 동의권 등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나 위원회의 법률안 발의 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로 시작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된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 밖에도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조약을 체결,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조약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로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먼저 국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 감사권**과 국정에 특정한 사안이 생기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국정 조사권**을 가진다. 또한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의 임명에 **동의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법률에 정한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행정은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작용을 의미하며, 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행정부**라고 한다. 근대 초기 행정부의 역할은 국방이나 치안에 한정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행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실현을 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삼는 현대 복지 국가의 등장 이후 행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 국무 회의, 행정 각부, 감사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동시에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을 임면하고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비준하며, 선전 포고나 강화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도 가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 임시회 소집권, 국회 출석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등도 가지며, 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헌법 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즉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관련 문서에는 **부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총리령을 발하거나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일정 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부의 구체적 행정 사무는 행정 각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들은 소관 사무를 집행하고 소관 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감사원은 행정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의 주요 권한으로는 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이 있다.

23.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국회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후보자 □□□의 ㉠ 임명 동의안 의결
- ◇◇사과의 진상 규명을 위한 ㉡ 국정 조사 실시
- 대통령이 ㉢ 재의 요구한 △△법 ㉣ 개정안 재의결

- ① ㉠은 감사원장 임명 시에도 실시된다.
- ② ㉡은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 ③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을 할 수 있다.
- ④ △△법 개정안은 ㉣ 이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 ⑤ ㉣은 ㉢과 달리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

24. 밑줄 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부의 대표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 정부 제출에 의한 입법이 늘어나고, ㉡ 국회가 제출한 법률 중 ㉢ 의결·통과된 법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 입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면서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 ① ㉠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 ③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⑤ ㉤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25.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의 모든 정책 결정은 국무 회의를 거쳐야 한다.
- ② 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A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④ A는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A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6.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 현재 갑국 의회의 본회의에는 ○○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표는 갑국 의회 재적 의원의 정당별 의석률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례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입법 절차를 적용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의석률(%)	4	20	46	26	4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 갑국 의회 재적 의원은 250명이며,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재적 의원 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 각 정당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으며, 본회의 표결 시 각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입장대로만 투표하고, 기권과 무효표는 없음.

학생 : _____ (가) _____

< 보 기 >

- ㄱ. A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 ㄴ. B당, D당, E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면 개정 법률안이 가결될 수 있어요.
- ㄷ. A당, E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면 개정 법률안이 가결될 수 없어요.
- ㄹ.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B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면 개정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돼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사법과 지방 자치

사법(司法)이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사건에 국가가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이나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밝히는 작용을 가리킨다. 행정은 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작용인 데 반해, 사법은 법질서가 침해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작용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권력 분립을 확인하는 규정이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사법권 독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가지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행정 재판권 등을 행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며, 재판을 진행할 때 다른 국가 기관이나 상급 법원은 물론 정당이나 사회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의 주요 권한에는 위헌, 위법 명령 및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대통령 및 국회 의원에 대한 선거 소송 재판권 등이 있다.

대법원 아래에는 **고등 법원**이, 고등 법원 아래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룬다. 이 밖에도 전문적 영역의 사건을 다루는 특수 법원으로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특허 법원** 등이 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 외에도 재판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제도와 원칙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심급 제도를 들 수 있다. **심급 제도**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로 운영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법원 판결 이외의 결정, 명령에 불복할 경우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급 제도는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공개 재판주의**나, 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는 **증**

거 재판주의 역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법 작용은 법원이 담당하지만, 헌법 관련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별도로 담당한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중 대부분은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으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헌법 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사하는 **탄핵 심판**,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여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권한 쟁의 심판**도 담당한다.

한 국가의 일을 중앙 정부가 모두 처리하게 되면 국가 안에 있는 각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에만 집중되면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지방 자치**라고 한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충실히 운영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로 구분된다.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의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지방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단체 자치**라 하고, 그 지방의 공공 문제를 주민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주민 자치**라 한다. 바람직한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모두 시행될 때에 실현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결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 자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지역 주민은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는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밑거름이 된다.

둘째, 지방 자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중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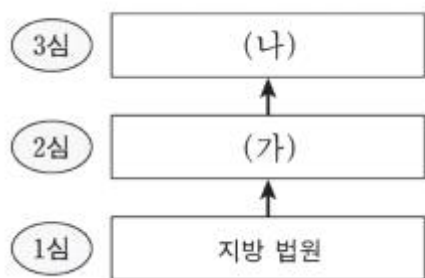
권력 분립 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내에서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 수평적 권력 분립 못지않게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도 중요하다. 지방 자치는 정치권력이 중앙 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하여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27.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도죄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은 항소하였고, 항소 법원인 A는 갑에게 형 감경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후 상고한 갑은 상고심 계속 중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B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A가 '지방 법원 합의부'라면 B는 '고등 법원'이다.
- ② B는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을 가진다.
- ③ B의 장(長)은 C의 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
- ④ B는 직권으로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C는 A의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28.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일 사건에 대해 2심이 항소심이라면 3심은 항고심이다.
- ② (가)에서의 재판이 민사 재판이라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가)가 지방 법원이라면 (나)는 고등 법원이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 ⑤ (가), (나)의 법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수 있다.

2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을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을은 갑을 ○○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특례법 조항에 따라 갑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을은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A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특례법 조항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A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됨으로써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 법률 조항의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보 기 >

- ㄱ. 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ㄴ. 을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 ㄷ. A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 ㄹ. 헌법 재판소는 입법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정한 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지방 자치 제도를 규정하였다. 지방 자치제 시행의 법률적 근거인 「지방 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52년 최초의 지방 의회가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계속 미루어지다가 4·19 혁명 이후인 1960년에야 처음으로 모든 자치 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세력이 지방의 회를 폐지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임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방 자치제는 오랫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다. 이후 1991년 주민 선거를 통해 각급 지방 의회를 구성하면서 지방 자치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급별에 따라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시·군·자치구로 구분되며, 각 급별로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자율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 교육 자치 관련 집행 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 기관의 견제 및 감시 기관**이기도하다.

이러한 지위와 관련하여 지방 의회는 자치 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 4년의 지방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나뉜다. 내부 조직으로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지방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집행 기관**으로서 직원을 임면 및 감독하고 소속 행정 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을 지휘한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역의 **각종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등도 가진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주민 참여의 측면에서 지역 주민은 주민 공청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방 자치 단체에 전달할 수 있고, 주민 투표제나 주민 소환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같이 지방 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지방세보다는 국세 중심이어서,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는 독자적 재원이 부족해 중앙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중앙 정부의 요구에 제약되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지방 자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다 보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등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은 지방 자치의 실현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가 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바람직한 자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지닐 때,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0.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A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B가 임명한다. A의 재판관 중 3인은 C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D의 장(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리고 A의 장(長)은 C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B가 임명한다.

 - ① A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 ② A는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을 가진다.
 - ③ B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 ④ C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확정한다.
 - ⑤ D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7조 (사후관리) 제1항 ㉢ ○○시장은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은 ○○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 ② ㉡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도 의회가 가진다.
- ③ ㉢은 ○○시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 ④ ㉣은 ㉢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 ⑤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32.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 주민들은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 조례안’을 적법한 요건을 갖춰 A에게 제출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청구하였다. A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B에
부의하였다. B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의결된
조례안은 A에게 이송되었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는다.
- ② B는 집행 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례를 집행한다.
- ③ B의 장(長)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 ④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 ⑤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으로 A를 견제할 수 있다.

9.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우리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이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나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으로 산출되고 이 정책이 국민에게 평가받는 **환류** 과정, 즉 투입과 산출,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시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이처럼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활동을 **정치 참여**라고 한다.

대의 민주제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정치권력의 행사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이미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에 의한 환류를 통해 의회나 정부가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민은 정치 참여를 통해 공익에 관한 관심과 정치적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정치적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

대의 민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로 직접 출마함으로써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선거 외에도 시민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단체를 지지, 후원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으며, 이익 집단에 가입하여 특수 이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해당 집단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시민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 **독자 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언론사에 전달하거나 **공직자와 접촉**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방법, 특정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해당 부처에 **청원**하는 방법, 자신이 지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 각종 단체나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는 오늘날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더욱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 시민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부나 언론 등에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가상 공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현대 민주 정치의 성패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바람직하고 활발히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민은 다음과 같은 정치 참여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정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권력의 부정부패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으로 이어져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자신과 견해가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대 사회에서 각자 사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폭력과 같은 비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키워 정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3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 정책 결정 기구에 ㉡ 투입되어 정책으로 형성·조정·집행되는 ㉢ 산출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의 산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 환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수정·보완되거나 국민의 요구가 재투입되기도 한다.

- ① 입법부는 ㉠에 해당한다.
- ② 집단과 달리 개인은 ㉡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언론은 ㉣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은 모두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정치학자에 의하면 정치 체계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 정책 결정 기구로 전달되는 ㉡ 투입,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들어가 공공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 산출, 산출이 투입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 체계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 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 대표적인 예이다.
- ②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예이다.
- ③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 ④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 ⑤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10. 선거와 선거 제도

오늘날 대의 민주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아 국가를 운영한다. 이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를 **선거**라고 한다.

선거는 대의 민주제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민주 정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그래서 민주 국가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의 4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민주 정치 과정에서 선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자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선거는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대표자의 업무 수행이 국민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요구가 표출되고, 선출된 대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선거구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劃정한 일정한 지역적 단위로,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 대 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쉽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주요 정당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커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그러나 여러 후보자 중 한 명만 당선되므로 주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져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중, 대선거구제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중, 대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어 선거 과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선거를 통한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수 대표제는 여러 후보자 중에서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고전적인 대표 결정 방식이다.

다수 대표제는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 다수 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또는 득표한 순서에 따라 일정 수의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당선자 결정 방식이 쉽고 간편하지만 절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 반면 **절**

대 다수 대표제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 유효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제가 대표적이다. 절대 다수 대표제는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당 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줄이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며,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에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절충하기 위하여 국가에 따라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혼합하는 혼합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공직 선거는 크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로 구분된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 1인 2표 행사를 통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이 선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상대 다수 대표제로, 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취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지방 선거에서는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과 기초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한다.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1인 2표 행사를 통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이때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은 소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는 반면, 지역구 기초 의회 의원은 중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공정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도 후보자로 나설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후보자 간의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공정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의 투명한 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선거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선거

제도의 시행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및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 선거에서 여러 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름으로써 주민들이 짧은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사표를 줄이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는 관권 선거나 금권 선거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시민 의식이 성장하고 정책 기반 선거를 실현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3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 의원은 100명이며,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80명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 비례 대표 의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표는 시기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t대>						<t+1대>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지역구 당선인수 (명)	9	20	21	30	80	지역구 당선인수 (명)	1	32	1	46	80
정당 득표율 (%)	80	20	0	0	100	정당 득표율 (%)	0	50	5	45	100

* 비례 대표 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음.

- < 보 기 >
- ㄱ. t대는 t+1대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 ㄴ. t+1대는 t대에 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 ㄷ. t대 정당 제도에서는 t+1대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 ㄹ. t+1대 정당 제도에서는 t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2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0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1인을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며,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 각 1표씩 2표를 행사한다.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 직후 의회 과반수를 확보한 단독 정당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다. 단독 과반수 정당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다. 아래 표는 최근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구분	득표율(%)	의석률(%)	구분	득표율(%)	의석률(%)
A당	50	45	A당	33	33
B당	15	20	B당	26	26
C당	25	20	C당	35	35
D당	10	15	D당	6	6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출마자는 없으며, 각 선거의 투표율은 100%, 무효표는 없다.
** 지역구 의원 선거의 득표율은 각 정당이 전국 모든 지역구 선거구에서 얻은 표를 총투표자 수 대비로 구한 비율이다.

- < 보 기 > —
- ㄱ.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0% 미만인 정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 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는 정당의 연합에는 A당이 반드시 포함된다.
 - ㄷ. 지역구 의원 선거 득표율과 총의석률의 격차가 가장 작은 정당은 C당이다.
 - ㄹ. A당과 D당의 총의석률의 합은 B당과 C당의 총의석률의 합보다 크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정당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정당은 공익을 도모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은 이를 정책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는 등 자신의 활동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처럼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현대 정치를 정당 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의 민주제에서 정당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정치적 총원** 기능을 담당한다. 정당은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대표자를 배출한다.

둘째,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한다.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정당은 특정 쟁점에 대한 당의 견해 표명, 강연회, 정책 홍보, 당원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정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수에 따라 일당제와 복수 정당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당제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장기간 집권하는 정당 체제를 의미한다. 일당제 아래에서는 독재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복수 정당제는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눌 수 있다. **양당제**는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 책임 정치를 확립할 수 있으며 정국이 비교적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는 단점도 있다.

다당제는 세 개 이상의 주요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로,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며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반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작아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다.

오늘날 시민은 정당을 통해 다양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정당에 직접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각종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원이 되면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권, 당의 정책 입안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지는 한편,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따르고 당헌, 당규를 준수하며 당비를 납부할 의무 등을 진다. 또한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정당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할 수 있으며, 정당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당 조직의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소수의 당 지도층이 정당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 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일반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이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정당이 정책이 아니라 인물이나 지역에 따라 좌우될 경우,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당 정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에서 일반 당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이 이념과 비전을 갖춘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가) 을/를 주된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정당은 대중 집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동체 문제에 대한 ㉠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유권자의 ㉡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표출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에서 ㉢ 정치적 충원을 통해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한다. 정당은 ㉣ 정부와 의회 사이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거나 ㉤ 정부에 대한 비판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가)는 이익 집단과 구별되는 정당의 특징이다.
- ② 정당은 ㉠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은 정당의 여론 형성과 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 ④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통해 ㉢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⑤ 국정 조사 요구는 ㉤보다 ㉣의 성격이 강하다.

38. 다음 자료는 어느 정당의 개정 전·후 당헌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정 전 당헌	개정 후 당헌
제 ○○조(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선정) ㉠ <u>중앙당 최고 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한다. 다만, 중앙당 최고 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대표가 후보를 선정한다.</u>	제 ○○조(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선정) ㉡ <u>대의원 투표와 일반 당원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후보를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구의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 무작위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u>

- ① ㉠보다 ㉡에서 후보 선출 과정이 더 폐쇄적일 것이다.
- ② ㉠보다 ㉢에서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할 것이다.
- ③ ㉠보다 ㉢에서 유권자 지지가 낮은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 ④ ㉡보다 ㉠이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할 것이다.
- ⑤ ㉢보다 ㉡이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용이할 것이다.

39.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t 대				t+1 대			
정당	A	B	...	합계	A	B	...	합계
의석률(%)	30	31	...	100	52	43	...	100

* t 대와 t+1 대에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수는 각각 4개이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보 기 >

- ㄱ. t 대는 t+1 대에 비해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ㄴ. t+1 대는 t 대에 비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 ㄷ. t+1 대는 t 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 ㄹ. t 대에서는 t+1 대와 달리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언론

이익 집단이란 특정한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을 말한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 단체, 기업가 단체 등이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적 이익이 세분되고 다양해졌다. 그런데 의회나 정당만으로는 이처럼 다양하고 세분된 직업적 이익을 충실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익 집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를 지닌 시민의 이익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

이익 집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대표제나 기존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구성원에게 집단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식을 증진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이익 집단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익 집단은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정당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반면,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익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책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합법적인 기부금 제공, 시위, 파업 등의 활동을 하는데, 시민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이익 집단의 활동이 지나치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심지어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이익 집단이 경쟁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연하고 사회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민은 이익 집단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도, 이러한 참여가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민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환경 단체, 인권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시민 단체이다.

과거 시민 단체의 주된 관심 영역은 정치, 경제 영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시민 단체의 활동 범위가 환경, 소비자, 문화 등의 영 역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 단체의 활성화는 오늘날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이 밖

에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도 한다.

시민 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의 이익을 표출하는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익 집단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익 집단이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시민 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 단체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쟁점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기자 회견 및 보도 자료를 낸다. 또한 관련 공직자를 면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서명 운동이나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 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선 **시민 단체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낮은 편**이고,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더라도 회비를 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수 활동가가 내부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일반 회원의 의사 결정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시민 단체가 관료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시민 단체의 운영 자금이 정부 지원금이나 외부 후원에 의존함으로써 **시민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정부와 기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은 시민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단체의 의사 결정 구조를 민주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시민 단체는 꾸준한 회원 확충을 통해 회원 회비 중심의 **재정 자립을 실현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언론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즉 언론은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및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국가 권력이나 기업, 각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언론은 시민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시민이 언론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각종 매체를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정치 과정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은 독자 투고나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쟁점이나 문제를 알릴 수도 있다.

시민은 언론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사건의 의미를 전달받기도 한다. 그런데

때로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편파, 과장 보도를 하기도 한다. 이는 시민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시민은 언론 보도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0.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대중은 자신의 의견이 우세한 여론에 속하면 강하게 주장하지만, 열세에 속하면 침묵하려 합니다.
을 : 대중 매체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①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 ⑤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42.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t 대				t+1 대			
	A	B	...	합계	A	B	...	합계
의석률(%)	30	31	...	100	52	43	...	100

* t대와 t+1 대에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수는 각각 4개이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 보 기 > —

- ㄱ. t 대는 t+1 대에 비해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ㄴ. t+1 대는 t 대에 비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 ㄷ. t+1 대는 t 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 ㄹ. t 대에서는 t+1 대와 달리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2.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A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B의 보건 의료 정책에 관련된 공약의 평가를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서 A는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B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로 조직된 C는 B를 방문하여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정부가 특별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① A는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
- ② B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 ③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④ A는 B,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⑤ B는 A, C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43.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 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A는 해당 정책이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식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반면,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추진해 온 B는 해당 정책이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C는 A와 B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 공약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 ① A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② B의 활동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③ C는 여론을 반영하여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A와 달리 B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⑤ C와 달리 A, B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3. 민법의 이해

우리의 사회생활은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민으로서 국가와 관련된 생활이고, 후자는 개인으로서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생활이다. 국민으로서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公法) 이라고 하고, 개인으로서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私法) 이라고 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한다.

사람들 사이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를충족하기 위해 민법이 제정되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민법은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 민법은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 불법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민법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민법에는 출생, 혼인, 입양 등 가족과 친족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규정, 유언과 상속 등 친족 간의 재산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민법은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족의 문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민법은 **법질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민법은 개인의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민법이 제시하는 일반적 원칙은 법 일반에 두루 통용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민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는 가족 관계를 비롯한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근대 유럽의 시민들은 개인의 법률관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결과 형성된 재산과 각종 권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아 재산권도 불가침의 천부 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생각과 믿음이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민법의 기초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 즉 소유권에 대한 보장에서 시작한다. 민법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소유권 절대의 원칙** 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음으

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계약의 자유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의 강요와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계약 자유의 세부 내용에는 계약의 대상을 고르고 결정할 자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자유, 계약의 방법을 결정할 자유 등이 포함된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 또는 손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를 **과실 책임의 원칙**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이나 기타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근대 신분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근대 사회의 개인을 이러한 불합리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횡포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하였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였으며, 과실 책임의 원칙은 기업이 환경 오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권리의 불가침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나아가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오늘날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란 개인의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강조됨에 따라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불평등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저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나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 다음 자료에서 □□위원회의 판단에 나타난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 문
△△△△년 △△월 △△일

온라인 강의 해지, 보다 수월해져...

수강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온라인 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강의 수강 계약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 ①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④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익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45. A~C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관련 법규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B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C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보 기 > —
- ㄱ. A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 ㄴ. 임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행인의 부상에 대하여 임차인과 달리 건물 소유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은 B가 적용된 것이다.
 - ㄷ. C에 의하면, 소유권은 사유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 ㄹ.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A, B, C로 인해 현대의 사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독과점,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각각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계약 공정성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①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 ② ㉡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 ③ ㉢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 ④ ㉣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⑤ ㉤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47. (가), (나)에서 도출되는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나) 개인 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부합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 ① (가)는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가)는 원칙적으로 국가를 포함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법률 관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③ (나)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 ⑤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겪은 이후 (나)는 (가)로 수정되었다.

14. 재산 관계와 법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회적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학생이 아침 등교를 위해 버스를 탈 때도 운전기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학생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버스 요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생은 학교에 무사히 갈 일을, 운전기사는 요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과를 약속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가리켜 **계약**이라고 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은 부동산 매매와 같은 소유권의 이전,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시설의 설치 및 수리와 같은 용역의 제공,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상인이 고객에게 2만원이라는 가격을 제안하고, 고객이 그 가격을 받아들인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제안하는 의사 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즉 계약은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성립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한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 등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도박이나 범죄를 내용으로 한다가나 신체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방식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하였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했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근로 계약 등과 같이 중요한 계약일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명확히 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기며, 이를 **계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이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계약에 따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대개 채권과 채무는 쌍방이 동시에 갖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

람이 전화로 피자를 주문했다면 주문한 사람은 피자를 배달받을 권리와 피자값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피자 가게 주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자를 배달할 의무와 피자값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계약에서 정한 각자의 의무를 실행하고 지키는 것을 **계약의 이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고품 매매 거래 계약을 한 후, 정해진 날짜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약속한 물품과 물품 대금을 주고받아 각자의 의무를 다하면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할수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물품을 보내 주지 않거나 보내 준 물품의 모양이나 수량이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만 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 사람에게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책하던 중에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로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다면 피해자는 부상 정도와 회복 기간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배상과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며, 이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러 한 행동뿐만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행위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거나,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이를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넷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에는 재산적인 것뿐만 아니라생명, 자유, 명예 등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다섯째,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즉 단순히 사건의 전후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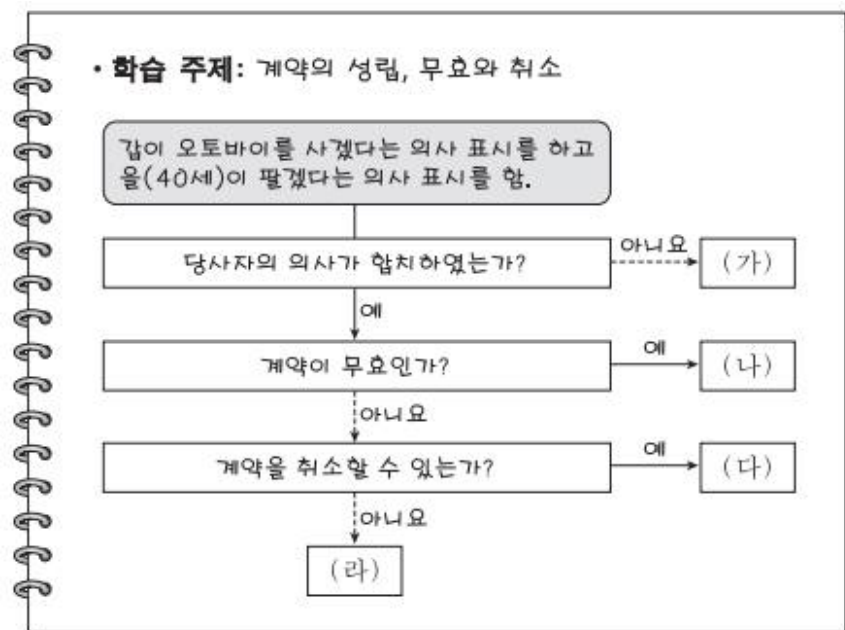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손해 배상**이라고 하며, 민법에서는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폭행을 당해 치료비가 발생하고, 치료 기간 일을 못 해 임금 손실이 발생하면 가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후유증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의 형식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직접 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어린이어서 책임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가 가해자인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직접적인 가해 행위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수 불법 행위**라고 한다.

4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20세의 갑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는 (가)에 해당한다.
- ② 25세의 갑이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산다고 통지하였는데 을이 150만 원에 판다고 통지한 경우는 (나)에 해당한다.
- ③ 17세의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정가에 구입한 경우는 (다)에 해당한다.
- ④ 40세의 갑이 만취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서 을이 제시한 오토바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는 (라)에 해당한다.
- ⑤ (나)의 경우와 (다)에서 취소된 경우 모두, 갑은 오토바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49.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보행자 을을 다치게 하였다.

(나)

질문	사고 당시 상황	
갑의 나이는?	㉠ 19세 이상	㉡ 19세 미만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가?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갑이 을을 다치게 한 때는?	㉤ 병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종업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중	㉥ 휴일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중

< 보 기 >

- ㄱ. ㉠, ㉡, ㉤의 상황에서 병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 ㉥의 상황에서 갑은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 ㉢, ㉥의 상황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 정은 을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ㄹ. ㉡, ㉢, ㉥의 상황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 정이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해서 갑, 정은 모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0.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 을은 정비 실수로 병이 맡긴 자동차의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에 병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 A(18세)는 동갑내기 B, C, D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의 부모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 보 기 >

- ㄱ.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ㄴ. 갑은 을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 ㄷ. 책임 능력이 있는 B의 행위에 대하여 B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ㄹ. D가 단순히 망만 보았을 경우 A의 부모는 B와 C에게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1.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17세)은 평소 사고 싶었던 고가의 오토바이를 을(30세)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하였다. 한편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다.

(나)

질문	상황	
계약 당시 병의 동의를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 예	㉣ 아니요

- < 보 기 > —————
- ㄱ.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ㄴ. 갑은 을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 ㄷ. 책임 능력이 있는 B의 행위에 대하여 B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ㄹ. D가 단순히 망만 보았을 경우 A의 부모는 B와 C에게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2.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14세)는 B(A의 법정 감독 의무자) 몰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C를 부주의로 다치게 하였다.
- 대학생인 갑(19세)은 학비를 벌기 위하여 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식사를 하던 손님 병을 부주의로 다치게 하였다.

- < 보 기 > —————
- ㄱ. 사고 당시 A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B가 A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B는 C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ㄴ. 사고 당시 A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C의 부상이 B의 A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라도 B는 C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갑의 병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ㄹ. 을의 병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갑과 을의 병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족 관계와 법

가족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작은 집단이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 공동체이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부간 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은 서로 남남인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여야 한다. 성년 즉 19세 이상이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민법에서 제한하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혼인하여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합치**하여야 한다. 강압(강박)이나 속임수(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로 성립한 혼인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법률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더라도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아 다양한 법적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사실혼이라 하며, 이 경우에는 부부간의 법적 의무와 권리가 제한적으로만 발생한다.

혼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를 인정받으면, 부부는 남편 또는 아내로서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양 당사자의 가족 간에도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혼인은 법적 관계이므로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의무도 발생한다. 혼인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생활하겠다는 약속이므로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동거와 부양의 의무**라고 한다. 생활비는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업주부의 경우 외부 경제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벌지는 않지만 육아나 가사 노동 등을 통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배우자, 자녀 외에 부모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 갈 수 없는 처지라면 이들을 도와줄 부양 의무가 있다.

혼인은 두 인격체의 결합을 의미하지만, 재산의 소유와 관리, 처분 등은 각자가 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부부 별산제**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혼인 전에 각자가 모은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자의 빚 역시 공동의 것이 될 수 없어 어느 한쪽이 진 빚에 대해 배우자가 갚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가 가정을 함께 꾸려 가는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과 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생활비, 양육비 지출과 같은 일상생활의 여러 일은 남편과 아내가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다. 남편이 신청한 택배의 배송비를 아내가 지급하기도 하고 남편

이 대신 값을 치르고 아내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을 서로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일상 가사 대리**라고 한다. 일상 가사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라 해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지게 되며, 일상 가사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해서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전자는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이다.

협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협의 이혼은 이혼의 이유를 묻지 않으나,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고 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해 **이혼 숙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허용되며, 가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이 이루어지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또한 어느 한쪽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인 친자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고,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자 관계가 바로 형성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성 된다.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 절차를 모두 마치면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친자 관계가 형성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고, 자식에게는 **재산 상속의 권리**가,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발생한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성격도 강하다.

부모는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자녀를 징계**할 수도 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 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은 자녀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해야 하며 자녀를 학대하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친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53.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을이 병을 출산하였다. 그 후 갑은 을, 병과 함께 홀어머니 정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운전자 A의 자동차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갑이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갑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진 후, 갑이 모든 재산을 아동 복지 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효한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갑의 가족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데,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비율이 같고 직계 존속의 비율은 이들보다 작음.
** 이 사례에서는 유류분을 전액 청구하는 것을 전제함.

< 보 기 >

- ㄱ. 갑의 권리능력은 사망 신고와 상관없이 사망함으로써 소멸된다.
- ㄴ. 운전자 A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운전자 A는 을과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
- ㄷ. 을이 유류분권을 행사해 받게 되는 유류분의 액수는 병이 유류분권을 행사해 받게 되는 유류분의 액수보다 많다.
- ㄹ. 을, 병, 정 모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지병으로 최근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에게는 아내 을(55세), 딸 병(28세), 아들 정(25세)이 있었다. 당시 갑에게는 부동산 1억 원, 은행 대출로 인한 채무 1억 5천만 원이 있었다. 별도의 유언은 없었다. 정은 법이 정한 기간 내 한정 승인하였으나, 을과 병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이 정한 기간 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 ① 병에게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 ② 을, 병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 ③ 병은 혼인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차이가 있다.
- ④ 정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지게 된다.
- ⑤ 갑 사망 당시 병이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5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만 18세이다. 갑에게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갑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만 20세의 을과 ㉡ 결혼식을 올린 후 ㉢ 혼인 신고를 마쳤다.
•병과 정은 모두 만 35세이다. 병에게는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아 둔 돈으로 마련한 ㉣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혼인 의사가 있는 병과 정은 ㉤ 결혼식을 올리고 ㉥ 부부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① ㉡으로 인해 갑은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 ② ㉢으로 인해 갑과 을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 ③ ㉣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으로 인해 정은 ㉣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 ⑤ ㉥으로 인해 병과 정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한다.

5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과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다 을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 갑은 을과 ㉠ 합의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을이 이혼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으면 ㉡ 다른 방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 갑과 을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는 갑 명의의 집이 한 채 있다.

- ①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②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⑤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16. 형법의 이해

국가는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유해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일정한 형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규범, 즉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형법이 없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이나 응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보복이나 응징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과 어느 정도로 응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형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게 되었다.

이처럼 형법은 개인의 자의적 보복이나 응징을 금지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도록 하여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그에 따른 처벌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형법은 개인의 생명, 재산 등과 같은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밝혀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국민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이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가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그 행위를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범죄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형벌을 가할 수 없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의 적정성까지 보장하여 법관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잘못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나쁜 행동’ 등으로 표현하는데, 국가는 이러한 행위 중에서 특히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법률로 정해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이처럼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행위 중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여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형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어떤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에 대해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면 이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범질서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법성**이라고 한다. 구성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 형법은 **정당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된 행위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신 미약자,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지만,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형벌이라고 한다. 형벌은 법익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에 해당하는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있으며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자유형**에는 구금 기간 및 징역 여부에 따라 징역, 금고, 구류의 형벌이 있다. **명예형**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박탈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형벌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다.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는데, 벌금과 과료는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형벌이고,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보안 처분이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안 처분에는 보호 관찰과 치료 감호가 있다. **보호 관찰**은 범죄자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치료 감호**는 심신 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하여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 밖의 보안 처분에는 수감 명령, 사회봉사 명령,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등이 있다.

57.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을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 파일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몰래 복사한 행위와 관련하여 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컴퓨터 파일과 같은 전자 정보를 복사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도 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 보 기 > —

- ㄱ.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모두 적용된다.
- ㄴ. 범죄와 처벌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ㄷ. 적용할 형법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ㄹ. 범죄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8.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의 개정으로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A 원칙에 반한다. 이와는 달리, 기존 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 판례의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 < 보 기 > —

- ㄱ. 형법의 보장적 기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 ㄴ. 행위 당시의 판례를 신뢰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ㄷ.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의 정도는 법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ㄹ. 행위 당시의 형벌 법규를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30세)은 길을 걷다 을(18세)과 병(13세)이 A를 구타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 하였다. 갑의 개입에 화가 난 을이 갑자기 흥기를 꺼내 덤비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갑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 을을 벽으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화가 난 을이 더욱 심하게 덤벼들자 갑은 일단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지만 을은 갑을 끝까지 추격하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갑은 끝까지 따라온 을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자 ㉡ 옆집 대문을 부수고 그 집 차고에 들어갔다. 출동한 경찰관은 을을 ㉢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A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재 을에 대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① 을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을은 형벌과 동시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병에게는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A는 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은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 ㉡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두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6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경찰관 갑은 절도범을 적법하게 긴급 체포하였다.
- 을의 범죄 후 그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
- 병은 이틀 전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A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A를 붙잡으면서 부득이하게 폭행하였다.
- 정의 종업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객관적 법질서에 반하지만 정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무가 전화상으로 단순히 고성을 지른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폭행죄의 폭행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폭행죄로 기소된 무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① 갑의 체포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을을 개정된 형법으로 처벌해도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 ③ 병의 폭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정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 ⑤ 무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⑤ ㉠, ㉡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두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17.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죄가 확인되는 경우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데, 국가가 수사를 거쳐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일련의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한다.

수사란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수사 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수사를 개시한다. 이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체포나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형사 재판을 요청하는 **공소 제기**, 즉 **기소**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한편 검사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이나 동기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 법원은 형사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검사와 더불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공판**이라고 한다. 공판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판사는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검사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 후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하고, 범죄가 성립하면 유죄 판결을 하여 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집행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며,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기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피고인이 징역, 금고, 구류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 과료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는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이 성실히 복역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크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다.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귀 노력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형 집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수사하고 형사 재판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을 가한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원칙 및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봄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 추정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수사 기관이나 재판 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고문과 자백의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문 등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강제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국민이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영장 제도**라고 한다. 이는 수사 기관이 체포, 구속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수사 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 체포가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 영장은 필요하다.

영장 제도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한다. 이때 판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수사 기록과 직접 심문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한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피의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한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 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보석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소 후의 구속 단계에서 가능하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다.

한편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 보상 청구 제도**를 통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미결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명예 회복 제도**를 두고 있다.

61. 갑~병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 을이 상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병이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후 1년이 경과되었다.

- ① 갑은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적부 심사를 받게 된다.
- ② 을은 항소심 재판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
- ③ 을과 달리 갑은 형사 피의자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 ④ 병은 갑, 을과 달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병은 앞으로도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아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6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40세)은 을(45세)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병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기소 이후 을에 대한 갑의 폭행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병은 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갑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을은 갑에게 선고된 형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 ① 구속된 갑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병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기소 후 진행된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 ④ 을은 갑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⑤ 갑은 위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의 사기 범죄 사실에 대해 경찰에 ㉠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은 을에 대한 ㉡ 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여 ㉢ 피의자 신문을 하고 ㉣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였다. 을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속 절차의 적정성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였고 ㉤ 법원의 심사 중에 있다.

- ① ㉠은 범죄 피해자와 관련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 ② 수사 기관이 ㉡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예외 없이 필요로 한다.
- ③ 을은 ㉢을 받음에 있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없다.
- ④ 수사 기관이 ㉣을 신청하면 법원은 별도의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형식 심사만을 통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석방된다.

6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4세)은 얼마 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다 편의점 주인에게 적발되었다. 갑은 술과 담배를 가지고 황급히 도주하였지만 편의점 주인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였고, 급기야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였다. 마침 지나가던 을(30세)이 갑을 제압한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 ① 갑의 범죄 행위는 소년부 보호 사건의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 ② 갑은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 ③ 갑은 수사 종결 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 처분의 결정을 받게 되면 항고할 수 있다.
- ④ 갑에 대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을도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 ⑤ 을이 갑을 제압한 행위는 자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8세의 고등학생 갑은 공원에 갔다가 매점 뒤에 세워 둔 을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호수에 버렸다. 이에 을은 갑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도 배상받고 싶어 한다

- ① 갑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갑은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갑은 청소년 참여 법정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④ 을은 형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18. 근로자의 권리 보호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했던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심화, 노사 간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으로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으로 구분된다.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등 열악한 조건의 근로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 조건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 계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기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 사항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또한 「근로 기준법」의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 계약 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데,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이므로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구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갖는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한다.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 등이 있으며 법에 정해진 일정한 절

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와 같은 근로 3권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부당하게 근로 3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이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헌법,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임을 고려해야 한다.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 토론, 교섭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에도 근로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의 근로는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근로 기준법」은 청소년이 의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 업소나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 증명 서류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청소년은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 계약은 청소년이 직접 체결한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조건을 근로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휴일, 휴식 시간, 최저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낮춰서는 안 된다.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나 합의한 경우에는 하루 1시간, 일주일

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 또는 근로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 등을 할 수도 있다.

6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회사에 다니는 갑은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 성별만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 △△ 회사에 다니는 을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은 원거리 근무 발령을 회사로부터 갑자기 통보받았으며, 어떠한 업무도 배정받지 못하였다.

— < 보 기 > —

ㄱ.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 회사가 갑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ㄷ. 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갑, 을은 각각 ○○ 회사, △△ 회사로부터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식료품 회사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에 관해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가 안전에 합의하지 않아 결렬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파업을 이끌었다. A 식료품 회사는 인사 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갑(28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갑은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 보 기 > —

ㄱ.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갑이 A 식료품 회사의 인사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ㄷ. 갑의 행위에 대한 A 식료품 회사의 해고 처분은 부당 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ㄹ. A 식료품 회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시한 근로 조건에 관해 합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퇴근 후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된 갑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되려면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갑의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항소하였다.

- ① 갑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②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조합도 제기할 수 있다.
- ③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 ④ 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와 관계없이 갑이 제기한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6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기업에서 근무하던 갑은 특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을(○○ 기업 사장)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갑은 해고 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 부인 자신을 해고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하여 갑의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과 을은 각각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을의 재심 청구는 기각하였다.

— < 보 기 > —

ㄱ. 갑과 달리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ㄴ.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을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동일한 판정을 하였다.

ㄹ.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국제 관계와 국제법

국제 사회란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행위 주체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며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제 사회는 국내 사회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국제 사회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각국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는 국내 사회와 달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 국가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제 사회에는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한다. 국제 사회의 국가들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차이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제하기도 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근대 국제 사회는 30년 전쟁(1618~1648)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1648)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참가한 국가들은 주권 평등, 영토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의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로써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후 근대 국가들이 산업화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19세기 후반 유럽의 강대국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국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유럽 바깥의 여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유럽 여러 국가의 제국주의 정책은 국가 간의 충돌을 일으켜 결국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이 발발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은 파리 강화 회의를 열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1920)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강대국의 불참으로 국제 연맹은 처음부터 한계에 직면했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의 발발을 막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세계 평화와 국가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국제 연합**이 설립(1945)되었다. 국제 연합은 국제 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강대국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제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국제 사회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구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는 **냉전**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양극 체제는 1970년대 들어 공산 진영의 결속력 약화와 제3 세계의 부상으로 점차 완화되었고, 몰타 선언(1989), 독일 통일(1990), 구소련의 해체(1991) 등으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탈냉전 시대로 들어선 국제 사회는 다양한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다극 체제로 변모하였고,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념에 따른 갈등은 줄었

지만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개방화의 물결로 사람, 자본, 상품, 정보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세계화**란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는 점차 흐릿해지고 각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각국 정부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가 자국에 과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둘째,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국제적 시민 단체 등이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국제법과 같은 **국제 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다. 전통적인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로 국제법의 적용 영역이 개인,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제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국제법은 국제 분쟁을 겪는 당사자에게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한다. 국가 간에 영토, 무역, 자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법을 활용하면 보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유도**한다. 인권이나 환경 문제의 해결과 같이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경우, 국제법은 공동의 행위 기준을 세우고 여러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제법은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관련 국제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국제법의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로 조약 외에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국제 기구도 국가와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닌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로 인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법이다.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대표적인 국제 관습법으로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등이 있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

다. 이 밖에도 **판례나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은 국제법적 판단의 보조 수단으로 기능하며, 새로운 국제법이 성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내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제정되어 영토 내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국제법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오늘날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70.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국제 연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 ‘국제 연합 부패 방지 협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되어 2008년에 발효되었다. 국회는 이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보 기 >

ㄱ. ㉠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ㄴ.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ㄷ.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ㄹ. ㉣은 ㉢과 달리 헌법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1.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거 우리나라 ㉠ 민법상 혼인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성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비준한 ㉡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도록 하고, 아동 혼인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의 취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민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 보 기 >

ㄱ. ㉠은 국가 내 입법 기관에 의해 제·개정된다.
ㄴ. 우리나라에서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대통령이 비준한다.
ㄷ.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ㄹ. ㉠은 ㉡과 달리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2.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합의 중 하나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1993년에 발효되어 이행되고 있다. 이후 난민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 난민법이 2012년에 국회에서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보 기 >

ㄱ. 우리나라에서 ㉠에 대한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ㄴ. ㉠은 ㉡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ㄷ. ㉡은 ㉠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없다.
ㄹ. ㉠, ㉡은 모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

세계화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국제 사회를 이루는 국가들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다양한 **국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국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핵무기의 확산과 같은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또한 국제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는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해결될 수 있다.

현재 국제 사회가 당면한 대표적인 국제 문제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 보장, 즉 **안보**를 추구한다. 그런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 어느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비**를 늘리면 이웃 나라들 역시 위협을 느껴 군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상대국으로 하여금 군비를 더욱 늘리게 하는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구소련이 벌인 군비 경쟁은 안보 딜레마의 대표적 사례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군비 경쟁과 국가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종교, 인종, 자원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국지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테러** 조직 역시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공산 진영이 붕괴한 후 세계는 단일 시장으로 재편되었고, 세계화에 따른 자유 무역의 확대는 선진국과 일부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이 도태되면서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높은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으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상품을 생산하는 개발 도상국 사이의 빈부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모자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기아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데 집중한 반면, 상대적으로 환경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각국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구상의 공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국제 사회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 사회는 환경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개별 국가들이 지구의 환경 보호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 인권은 절대적 권리이기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일부 지역의 여성과 아동,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떠도는 난민,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몇몇 국가의 시민은 모두 인권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국제 문제는 국제 사회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간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관리하고 여러 국가를 중재할 주체로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회원국 간의 협약과 승인을 통해 설립되며, 각국이 따라야 할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다.

오늘날 국제기구는 세계 평화의 유지,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 지구 환경의 보전, 인권 보호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다양한 국제 문제가 생겨나면서,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시민에 의해 조직된 국제 비정부 기구들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설립된 국제 연맹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국제 사회는 국제 연맹의 결점을 보완하여 1945년 국제 연합을 창설하였다. **국제 연합**은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 실현 및 국가 간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및 다양한 기구로 구성된다.

총회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제 사회의 합의된 규범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로, 경제 제재나 군사적 개입 등과 같이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5개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그중 1개국이라도 거부하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

이 밖에도 **국제 연합의 여러 기구**가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은 저개발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은 지구 환경을 살피고 환경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UNHRC)는 국제 연합에 가입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당한 인권 침해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에 창설된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구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적이 서로 달라야 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때 국제기구나 개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일방의 제소에 상대국이 응하여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재판이 개시되면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다. 그 밖에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7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 헌장은 A가 B의 권고에 따라 국제 연합 가입 신청국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냉전이 격화되면서 B의 상임 이사국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입하지 못하는 신청국이 발생하였다. 이에 모든 회원국이 의결에 참여하는 A는 독자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C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1940년대 창설된 사법 기관 C는 A와 B에서 선출된 15인의 국적이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A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② B의 모든 이사국들은 신청국의 가입 여부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
- ③ C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④ 다국적 기업 간의 분쟁이 국제 사회의 법적 분쟁이라면 C의 재판 대상이 된다.
- ⑤ B와 달리 A는 C가 내린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7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A는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압국에 대해 만장일치로 경제적 제재를 결정하였다.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는 170개국의 찬성으로 을국 정부에 소수민족 탄압 정책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C는 병국과 정국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 지역에 대해 병국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 ① A의 모든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진다.
- ② B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1국 1표의 원칙을 적용한다.
- ③ C는 국가 간, 국가와 개인 간 법적 분쟁을 다룬다.
- ④ C는 판결의 강제 이행을 위해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C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75.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국제 문제를 담당하며,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 < 보 기 > —
- ㄱ. A에서는 분담금에 따라 의결권을 회원국에게 차등적으로 배분한다.
 - ㄴ. B에서는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ㄷ. C는 국제 관습법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 ㄹ. C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경우 관할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⑤	2	①	3	④	4	④	5	②
6	⑤	7	⑤	8	④	9	⑤	10	④
11	⑤	12	①	13	②	14	②	15	④
16	②	17	⑤	18	④	19	②	20	④
21	①	22	④	23	①	24	③	25	⑤
26	③	27	②	28	⑤	29	⑤	30	③
31	⑤	32	⑤	33	①	34	③	35	③
36	⑤	37	⑤	38	⑤	39	④	40	②
41	④	42	⑤	43	③	44	②	45	③
46	⑤	47	②	48	⑤	49	⑤	50	②
51	③	52	③	53	②	54	④	55	③
56	①	57	①	58	②	59	③	60	④
61	④	62	③	63	⑤	64	③	65	①
66	③	67	①	68	⑤	69	④	70	①
71	①	72	②	73	①	74	②	75	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